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이상 신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유·초·중·고 특수학교를 22개교 이상(특수학급 1250학급)신설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8년 1173명인 특수교사 정원을 2022년까지 5000명 내외로 늘려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년간 총 1조6700억 원 가량을 투입하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분야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2008년 7만1484명에서 2017년 8만3833명으로 10년간 증가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특수학교 확충은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에 부딪혀 진척이 더디면서 장애학생들은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차가운 시신을 이겨내거나 거주지에서 먼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에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정도(6만3154명)는 일반학교에, 나머지 29% 가량(2만1619명)은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돼 있다.

정부는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학생 부모, 교원, 관련 단체 등 특수교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4대 분야,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22년까지 유·초·중·고 특수학교를 22개교 이상(특수학급 1250학급)신설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특수학교는 올해 174개교(1만325학급)에서 2022년 196개교(1만575학급)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특수교사 양성 대학(국립 6개교·사립 33개교) 중 부속학교 8개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특히, 유아단계에서 특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담임을 맡아 협력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통합유치원을 1곳 이상 설립하기로 했다. 통합유치원 내 일반학교와 특수학급은 1대1로 운영된다.

교육부,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특수교육대상자 2008년부터 10년간 증가

특수교사 2018년 1173명→2022년 5000명

특수학교 확충에 따라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2018년 1173명인 특수교사 정원을 2022년까지 5000명 내외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일반학교에 배치돼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생과 같이 수업을 받거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통합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중·중복장애 학생 지원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의 특성에 따라 지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

는 특수교육 연수 대상자를 매년 4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정도가 배치돼 있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확대 배치해 통합학급 지원을 강화하고 시각·청각장애 등 장애특성에 맞는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현재 42개소에서 2022년 5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진로·고등·평생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2022년까지 139교로 확대하고 체험활동 지원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진로 상담교사를 모든 특수학교(184개교)에 배치하고 교육·복지·고용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윈스톡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회를 2022년까지 17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도 벌인다.

김상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제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은 장애 학생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며 이들에게 교육은 시혜가 아닌 권리"라면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 해소되고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가격폭락’ 대봉감 폐기 4일 영암군 금정면의 한 대봉농가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격이 폭락한 대봉감 산지폐기가 실시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기승...한주새 확진 환자 49.4% ↑

매년 겨울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개인위생에 주의가 당부된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집단 시설 등 '급성 위장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다.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4일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192개 표본감시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노로바이러스감염증 감시현황에 따

르면 지난 47주(11월19~25일) 노로바이러스 감염환자는 133명으로 집계됐다.

전주 46주(12~18일) 89명보다 49.4%가 많은 수준이다. 전년 같은 기간(47주) 72명과 비교해도 84.7%를 상회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겨울~초봄) 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지난해 발생한 집단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99건중 11월 23건(23.2%), 12월이 33건(33.3%)이 절

반 이상을 차지한다.

장소는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등 보육시설·학교가 68건(68.7%), 일반음식점 10건(10.1%), 직장 7건(7.1%), 군대·경찰(4.0%), 요양원·병원·재활원·수양관 등 집단시설 3건(3.0%) 등이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전파 경로는 환자의 분변이 묻은 음식물이나 오염된 물을 먹을 경우 감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접 접촉에 의한 환자간 전파도 가능하다. 또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도 전파 매개체가 된다.

日해역서 북한인 추정 시신 3구 발견

일본 혼슈(本州) 북부에 위치한 아미가타(山形)현 인근 해역에서 4일 북한사람으로 추정되는 시신 3구가 발견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아미가타현 쓰루오카(鶴岡)시 인근 해역을 지나던 한 어선은 바다에 남쪽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1구가 포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 및 해상보안본부가 수색한 결과, 부근 해상 및 해안에서는 해당 시신 1구 이외에 또 다른 2명의 유체가 발견됐다.

3구의 시신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바다에 표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NHK는 전했다. 또 이 가운데 1명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들어간 배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최근 인근에서 발견된 무인 목조선의 승무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인근 해안에서는 전장 10m 정도의 무인 목조선이 표류하고 있던 것이 발견된 바 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아미가타현 해안에서 발견된 목조선에서 시신 8구 발견되기도 했다. 선박 및 사망자들의 국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인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기오염’ 인도서 선수들 구토로 경기 중단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인도와 스리랑카 크리켓팀 간의 경기가 벌어지던 도중 일부 선수들이 대기오염 때문에 계속 구토를 하면서 결국 경기가 수차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국제경기가 중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가디언은 3일(현지시간) 지적했다. 가뜰이나 대기오염이 심각한 뉴델리 등 인도 주요도시에서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대기오염이 극심해지고 있다.

지난 3일 뉴델리 페로즈 샤 코플라 스타디움에서는 인도와 스리랑카 크리켓 팀의 시범경기가 열렸다. 당시 대기오염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허용기준보다 15배나 높았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는 시작됐고, 스리랑카 선수들은 결국 참지 못해 팀닥터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20분간 경기중단을 심판에게 요구했다. 이후 경기는 다시 시작됐지만 스리랑카 선수 몇몇이 호흡곤란을 겪으면서 두번이나 또다시 중단됐다. 그래도 선수들은 경기를 끝까지 마쳤고, 결과는 인도 팀의 승리였다.

스리랑카팀의 닉 포타스 코치는 경기가 중단된 후 기자회견에 "우리 선수들이 필드에서 구토를 했다"며 "락커룸에서 산소까지 공급받았다.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동안 이런 일을 겪는 것을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인도 당국을 비난했다. 특히 일부 선수들은 락커룸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구토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생전 처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도 크리켓협회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CN 카나 회장은 "경기장에 관중이 20만명이 있었고 인도 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스리랑카 팀은 큰 수신을 피우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뉴델리에서는 대기오염 수준이 WHO 기준의 40배나 높아지면서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갔고, 의사들이 보건위기를 주장한 적이 있었다. 당시 뉴델리의 대기오염 수준은 하루에 담배를 최소 50개비를 피웠을 때 폐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한 것으로 지적됐다.

핀란드, 외국인 국경 교통범칙금 강력 징수

핀란드가 국경지대에서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고 떠난 외국인들에 대해 이의 수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핀란드 언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핀란드 경찰의 교통안전센터 데니스 파스테르스타인 소장은 핀란드 국영방송(Yle)에 출연, 올해 약 1만 2000명의 외국인들이 교통위반 범칙금을 부과받았고 이를 내지 않고 떠났으며 대부분 연락이 되지 않아 징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올해 범칙금이 부과된 외국인의 대부분은 이웃 에스토니아 사람들이다. 핀란드 경찰은 핀란드 국내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사람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각자에게 보낼 예정이다.

경찰은 직접 외국에 범칙금 징수 서류를 송부할 수는 없지만 핀란드로 와서 범칙금 고지서를 직접 받든지 아니면 그것을 우편으로 받을 핀란드 국내 주소를 알려달라는 편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약 정해진 날짜 안에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핀란드내에서는 차량에 대한 영장이 등록되어 운전자나 차량이 핀란드에 재입국할 때 금지당할 수 있다.

뉴시스

아제는 평창상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